

남북한 통일교육정책의 실상과 수렴방안 試論: 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 석 승*

I. 서론	내용 비교
II. 남북한 통일교육정책의 기초와 관리체계 비교	IV. 남북한 통일교육의 수렴방안 검토
III. 남북한 중등학교과정 통일교육 관련	V. 결론

Abstract

A Study on Real Fact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ir Reflection Plan: Focusing on Secondary School Textbook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real facts of unification education actually conduct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will first diagnose in depth how the difference between ideology and the system was actually reflected from the aspect of un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do so, it will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is and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which is the root of such ideology and system,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management system. Moreover, it will comparatively examine the content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in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s i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such detailed empirical analysis although it may be from a very limited asp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it examined approximate characteristics through abstraction of the contents related to unification among the units in use focusing on high school textbooks for us and secondary school (6 years) textbooks for North Korea

Even though the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North Korea is a very important task in establishing our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it is a fact that an empirical study is extremely difficult since unification education like ours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in North Korea and subscription to materials for such analysis is not easy.

Accordingly,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the said thesis can only assume the character of 'an essay' to comparatively study the real fac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hope that the said thesis would become a cornerstone of a study in such field in the future.

Key Words: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Education, South & Nor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Management System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장

I. 서론

1. 연구목적

분단과 함께 남북한은 각기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단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양측간 심리적·정신적 이질화가 심화·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안고서는 가시적으로 제도적인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정작에 ‘마음의 통일’을 의미하는 내적 통합을 성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내적 통합을 가져오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통일교육을 소홀히 한 채 갑자기 통일을 맞이한다면, 남북한간에 적잖은 갈등이 표출될 것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정부가 실시해 왔던 반공교육,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통일안보교육 등도 일종의 ‘통일교육’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분단 고착화를 조장하거나 지나치게 수세적인 안보논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통일교육은 이념지향적이어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마련이었다. 이는 당연히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에 입각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내용을 대폭 도입하는 등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9년에는 탈냉전적 통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활발하게 통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통일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북 인식의 차이로 ‘남남갈등’(南南葛藤)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¹

¹ 계층·세대·지역간에 나타나고 있는 대북 인식의 격차는 우리 사회 내에 이분법적인 이념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통합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발전

물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넘치는 그 자체는 결코 문제시될 수는 없겠으나, 통일의 당위성마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 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실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일단은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근본 원인이 우리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의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는 통일관련 강의는 교양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통일교육이 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²

한편 아직도 냉전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경우는 ‘통일교육’이 여전히 체제 방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의 ‘자주’ 조항과 제2항의 통일방안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김정일 정권 생존 및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³

다시 말해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등 대남전술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는 명시적인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 전술이 여전히 남한사회 교란에 효과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내적으로 체제 유지를 도모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통일교육’에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상을 비교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통일교육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통일교육정책의 기초와 원칙 및 통일교육 관리체계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

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²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pp. 158~159.

³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남전술 수행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남한 사회 내에서 공동선언의 제1항의 ‘자주’ 조항과 제2항의 통일방안 조항과 관련해 이에 대한 해석과 이들 조항의 향후 추진 방향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의 특징과 대응책,” 『국제정치논총』, 제 43집 3호 (2003), p. 260.

고 있는가를 비교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증 분석으로 비록 매우 제한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통일교육의 간극을 최소화하며 어떻게 수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개괄적인 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유인(誘因)을 삼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고대국가에서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동일하게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육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목표하는 인간유형은 시대와 국가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남한의 경우는 민주시민형성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 온 북한의 경우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또는 ‘주체형의 새 인간’ 형성에 각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분석해 보면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통일교육 역시 양측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 내용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교육 내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우에는 중학교(6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행 단일 가운데 통일 관련 내용 추출을 통하여 개략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우리의 통일교육 및 북한의 교육 일반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단행본 및 연구논문 등 2차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도 병행할 것이다. 이밖에도 남북한 통일교육 내용의 실태를 교과서를 통해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교방법론을 활용하겠지만, 비교기준(Criteria)의 상치(相馳)때문에 ‘시론(試論)의 차원’에서 피상적인 고찰에 국한시킨다.

3. 연구의 한계성

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분석은 우리의 통일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통일교육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 분석을 위한 자료 구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북한의 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북한 통일교육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한 통일교육 수립방안 모색에 있어서도 양측의 상이한 이념 및 체제로 인한 극명한 통일교육 내용의 차이 때문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교육의 실상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시론(試論)’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며,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II. 남북한 통일교육정책의 기조와 관리체계 비교

1. 남한의 통일교육정책 기조와 관리체계

가. 통일교육정책의 기조와 원칙

현행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통일정책의 기조를,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교육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이라며 통일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통일교육의 목표는 크게 자유민주주의⁴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⁵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는 “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⁶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다.⁷

즉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함양하며,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공동체의식 제고와 균형 있는 대북관 정립을,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평화변영의지 함양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 및 통일환경 변화 대처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관리체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그 기본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

⁴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한이 전체주의체제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원주의체제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년도 통일교육 지침서: 학교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b), p. 10.

⁵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통일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북한의 실상을 세계사적 추세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위의 책, p. 10.

⁶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2004), p. 9.

⁷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행 ‘통일교육지침서’(2006)을 참조.

정,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⁸이 제정됨으로써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이 확충되었다.⁹

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한마디로 통일교육의 주관부서는 통일부인 셈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종합하며, 예하 기관인 통일교육원을 통해 각종 통일교육기관인 사회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 각급 학교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¹⁰ 특히 통일교육원은 공무원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을 양성·지원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위한 지침서와 부교재와 자료들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협조한다.

한편, 정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⁸ 정부는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2004년 5월 2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동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듬해 1월 27일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통일부, 『2006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6), p. 224.

⁹ 위의 책, p. 224.

¹⁰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잘 나타나 있다: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 또는 시설에 한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

물론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부를 통일교육의 주관부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통일교육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¹¹은 반드시 통일교육심의위원회¹²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 25인 이내의 위원 중 6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 1항).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¹¹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¹²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에 규정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 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등의 사업을 행하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민간과 정부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을 짐과 동시에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통일교육에 대한 민간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지원 확대는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¹³

2. 북한의 통일교육정책 기조와 관리체계

가. 통일교육정책의 기조와 원칙

교육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어느 나라이건 주요 쟁점의 하나로 취급돼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만큼 학교교육을 철저히 정권 및 체제 유지의 기본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없다.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위시한 일련의 공산권 국가들이 일시에 붕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개개인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마비시키는 제도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세뇌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학교교육은, 교사는 곧 직업혁명가이며 학생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후비대이고, 학교는 혁명역군의 산실(원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 성격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¹⁴

북한 교육의 기본이념과 목표는 사회주의헌법 제43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견결한 혁명가’ 그리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라고 하겠다.¹⁵

¹³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6~27.

¹⁴ 김동규, “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 『통일교육연구』, 제2호 (2002), pp. 1~2.

¹⁵ 위의 책, p. 3.

우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¹⁶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¹⁷에서 ①당성과 노동계급성, ②주체사상, ③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④교육사업의 국가적 의무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견결한 혁명가’란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용감하게 적에게 도전하고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며, ‘공산주의적 새 인간’은 인간개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헌법상 드러나는 북한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양성¹⁸에 있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과정 중 북한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주체형의 새 인간’, 즉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헌신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목표와 연결되는 것이다.¹⁹ 한마디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로 논리의 발전을 거치면서 교육의 목적이 ‘공산주의 새 인간’에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긴 셈이다.

이 곳에서 ‘주체형 새 인간’의 기본품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고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인간을 말하며,²⁰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및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고 있다.²¹

¹⁶ 사회주의교육학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개조’를 최상의 명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인간개조로부터 연역되는 기본원리와 원칙 등을 도출해 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본원리와 원칙의 기본토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교육학은 이론의 적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행동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한 이론적이며 학문적 관심보다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 강령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실천 강령을 나열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181.

¹⁷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에 두고 있다.

¹⁸ 1977년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¹⁹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 183.

²⁰ 주체형 인간의 전형과 관련하여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지와 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인간형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주체형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학교교육과 조직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신효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p. 13.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교육이 추구하는 ‘주체형 새 인간’은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수호자’라는 체제 유지와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형인 것이다.²¹

한편 1998년 이후에는 북한이 ‘선군정치’²³를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선군사상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과학의 해’를 지정하는가 하면 ‘과학기술 중시 풍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기도 하다. 특히 김정일은 21세기를 정보화산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보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교육·출판·통신의 각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받아들여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²⁴

오늘날 북한의 ‘통일교육’ 역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을 기초로 북한 정권 및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북한식 통일교육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통일관련 교시나 각종 선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그 주된 관점은 남한이 미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결국 북한의 통일교육은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면서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부정성을 은폐하며, 정권 및 체제 정당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모기장론’에 입각한 폐쇄정책에서나 가능한 교육이라 하겠다.

나. 통일교육의 관리체제

북한의 학교교육제도와 행정체제는 완벽하게 중앙집중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

²¹ 신호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 동향,” 『통일교육연구』, 제 2호 (2002), p. 64.

²² 신호숙,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사회주의교육에서 주체교육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5권 1호 (2001), pp. 68~69.

²³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정치적·체제적 위기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에너지난과 공장의 노후화로 인한 공업생산성의 현격한 저하, 농업구조의 모순과 자연재해로 인한 만성적 식량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체제 붕괴 위협을 개혁·개방 등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군부의 비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선군정치 구호를 내세우며 군부에 호의를 베푸는 등 군부 장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²⁴ 신호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10)』, p.25.

²⁵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해방 후 미국의 점령과 그 침략성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의 통합이 좌절된 통한의 땅이다. 북한은 민족의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으며,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⁶ 이 때문에 북한의 통일교육 관리체계를 일반 학교교육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북한체제는 일체의 국가기구와 사회조직이 최고의 권한을 지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봉사하는 당·국가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 역시 다른 분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당의 지도원리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총괄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통제하고,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성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는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데,²⁷ 노동당 과학교육부 조직은 내각의 교육성뿐만 아니라, 동당, 군당 등의 하급체제로 연결되며, 결국은 각급 학교 당위원회로까지 연결되고 있다.²⁸

당은 교육과 관련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특히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사나 교육문제를 다룬다. 물론 행정적·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교육성이 담당한다.

북한의 교육법²⁹에 따르면, 국가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45조). 이 경우 국가에 의한 교육사업의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교육 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들 기관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원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의 보장 사업을 장악·지도하는 임무를 가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46조).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편제되어 있는데, 보통교육부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교원대학을, 고등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관장한다. 보통교육부는 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주로 ‘교육강령’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정안과 교수요강의 구성방향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북한 교육의 이념과 원리 및 당과 김일성·김정일의

²⁶ 김동규, “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 p. 4.

²⁷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a), p. 187.

²⁸ 김동규, “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 p. 4.

²⁹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을 참조.

교시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당과 김일성·김정일에 의하여 제시된 교육지침을 철저하게 관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안과 교수요강에 규정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모든 교사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 지침이 되며, 학습 주제별 시간과 학습 활동, 학습 방법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위하여 교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계획은 교수진도표와 교수안의 작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은 지방정권기관이 해당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 부문의 교원과 교양원 양성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47조). 교육성은 해당 업무를 각 도(직할시)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이 교육지침이 최종적으로 학교에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시된다.³⁰

한편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51조). 일선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장과 학교 단위 초급당위원회위원장인 부교장 그리고 각 분과와 경리주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별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 소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학교 당위원회가 있고, 이 당위원회 산하에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의 사회정치활동조직이 편재되어 있다. 학교장은 형식적으로는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는 해당학교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만, 학교에 파견된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사상적 동태를 지도·감독하며 사실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부교장은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며, 교수교양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당 우위의 통치체제에서 당의 통제력은 학교교육의 정치문제 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운영의 전반에 걸쳐 행사되고 있다.³¹

³⁰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a), p. 188.

³¹ 위의 책, p. 188.

Ⅲ. 남북한 중등학교과정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1. 남한의 고교과정 통일교육 관련 내용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논의해 보면, 통일교육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10년간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상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교과에 있어서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우선 각 교과와 기본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심화과정에서는 통일 및 북한에 관하여 심층적인 지식을 추가하여 다룰 수 있다. 특히 심화 보충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재량활동 시간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역시 최대한 통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에서는 범교과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통일과 관련된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 관점이나, 구성주의적 관점의 수업원리가 필요하다.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에서는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²

³² 최현호, “화해협력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2호 (2001), p. 230.

<표 1> 제7차 중등 교과에 반영된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

과목	교과내용	교육방향
도덕	과거에는 전 학년에 학습내용이 들어있었으나, 7차에서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집중 이수케 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2: 통일의 의미, 당위성,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이해 · 고 1: 분단원인 과정과 대내적 환경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해 통일에 필요한 자세를 배움.
국어	해방 이후 남북한의 이념 차이로 어휘도 달라짐. 어휘의 이질화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언어 차이점을 말소리, 어휘, 맞춤법 등으로 나누어 정리함. · 언어 차이의 원인 극복 방안을 토의함.
사회과	남한 사회과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로 구성되지만, 북한은 역사, 지리는 있지만 일반사회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의 경우 북한지방을 다룰 때 남한처럼 비중을 두고 경제교류, 금강산관광 등 현재의 교류 내용을 접목해 지도함. · 북한이 역사교육을 주체사상 교양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됨.
체육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과임. · 씨름, 국궁, 태권도 등 전통적으로 공유해 온 운동을 다룬다거나 강강수월래, 농악무, 살풀이 등 민속무용을 통일교육과 연계할 수 있음.
음악	남북 음악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분석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화가 안 됨.	· 교과 자체가 모든 영역에서 학년별로 민족 전통음악을 다루도록 구성돼 통일교육과 폭넓게 접목할 수 있음.
미술	남북 미술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분석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화가 안 됨.	· 우리 민족의 색에 대한 선호도와 의식, 전통 문양, 조소, 공예, 건축물, 한국화 등 다양한 미술품을 포함해 교육할 수 있음.

출처: 최현호, “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2호 (2001), p. 229.

여기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대한교과서(주) 간행의 『고등학교 정치』의 경우

대한교과서(주) 간행의 『고등학교 정치』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맨 마지막의 5단원(‘정치발전의 과제’)의 제4장(‘민족통일의 과제’)에서 통일 문제의 성격, 남북관계의 현황,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통일을 위한 준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통일문제의 성격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정상회담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의 교역 현황,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 군사·안보 분야의 남북관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등에 대해서,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통일을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 주민간 상호 적대감이 심화되는 조건, 동독 중3 남학생의 통일 1년 후 소감문, 서독 중3 학생의 통일 1년 후 소감문, 여러 나라의 통일 방식, 6·15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통일 방식 등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다루고 있다.³³

또한 이 책에서는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각종 도표와 사진, 영화 소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각 주제 말미의 ‘열린 과제’ 또한 현실성을 가진 질문으로서 폭넓은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한교과서(주) 간행의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경우

대한교과서(주) 간행의 『고등학교 사회·문화』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마지막 제6단원(‘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의 제3장(‘한민족의 현재와 미래’)에서 남북통일의 의미, 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 우리의 미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남북통일의 의미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영화 ‘공동 경비 구역(JSA)’ 장면과 함께 남북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에서는 통일의 장애 요인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대학생들의 통일관과 북한 출신과의

³³ 『고등학교 정치』 (서울: 대한교과서, 2003), pp. 264~274.

결혼 선호 여부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을 싣고 있으며, 이밖에도 언어 장벽의 문제, 남북 도덕 교과서 비교,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로는 남북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남북통일 농구경기 대회, 북한에서도 ‘홀러간 옛 노래’ 인기, ‘통일 세대’ 키운다, 동독과 서독의 문화 교류 일지 등의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두 쪽에 걸쳐 사진으로 보는 남북 교류의 현장이라는 코너를 마련, 화보 형태로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서는 정치적 모습: 선진 민주 복지 국가, 경제적 모습: 세계 경제 대국, 사회·문화적 모습: 문화 선진국, 국제적 위상: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 2020년의 내 모습 등에 대해 다루면서 세계와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³⁴

이렇듯 이 책에서도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처럼 각 주제 말미에 ‘열린 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의견 표출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간행의 『고등학교 시민윤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간행의 『고등학교 시민윤리』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원인 제5단원(‘국가 발전과 지구 공동체’)의 제2장(‘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에서 민족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 재외 동포에 대한 올바른 자세, 민족 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통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민족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민족의 정의, 민족 공동체의 의미, 민족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재외 동포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관련하여서는 재외 동포의 실상, 재외 동포의 나라 사랑, 재외 동포에 대한 올바른 시각 등에 대해,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통일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 통일 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³⁵ 이 책 역시 각종 도표와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다양하게 싣고 있으며, 각 주제와 관련해서는 ‘탐구 과제’를 설정, 다양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³⁴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대한교과서, 2003), pp. 252~264.

³⁵ 『고등학교 시민 윤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pp. 216~231.

라. 교육인적자원부 간행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간행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도 맨 마지막 단원인 제4단원(‘한국 윤리 및 사회사상의 정립과 민족적 과제’)의 제4장(‘한국의 진로와 민족적 과제’)에서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한국의 전제 조건으로서 남북한간 점진적 교류·협력, 상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해,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최소화,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시, 남북한 상호 동질성의 회복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들로는 자유와 평등, 개개인의 가치 기준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정신인 다원성, 전통 윤리에 기초한 반려 의식과 적선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배려,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관습,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관용, 생태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 사회적·국가적 갈등을 평화에 의해 해결하려는 비폭력주의와 평화주의 등을 들고 있다.³⁶

한마디로 이 책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통일교육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과목도 ‘탐구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심층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마. 금성출판사 간행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금성출판사 간행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역시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마지막 단원인 제4단원(‘현대 사회의 발전’)의 제3장(‘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김일성 체제의 확립, 주체사상과 김정일 후계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 교류, 국제 정세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³⁷

이 과목은 타 사회과 과목과는 달리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과목 역시 다양한 사진 및 도표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여 시각적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³⁶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pp. 255~261.

³⁷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서울: 금성출판사, 2003), pp. 298~319.

바. 두산(주) 간행의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경우

(주)두산 간행의 『고등학교 한국지리』는 예외적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5개 단원 중 제4단원(‘국토 통일의 과제와 노력’)에서 취급하며, 전 단원을 할애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장(‘북부 지역의 이해’)에서 북한의 인구 문제, 북한의 산업 구조 문제,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 등의 주제에 대하여, 2장(‘국토의 잠재력과 국토 통일’)에서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였다’, ‘분단된 한반도, 열리는 통일’, ‘남·북한간의 교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등의 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³⁸

이 과목 역시 다양한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실어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교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마무리 테스트를 통해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6종에 달하는 통일 관련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육의 내용은 비교적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성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영상세대를 겨냥, 사진이나 각종 도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지리』를 제외하고는 하나 같이 마지막 단원에 그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지막 단원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다루어짐으로써 학습자로서 하여금 심리적으로 통일교육이 타 과목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하며, 또 분위기가 어수선한 학년 말에 강의가 진행됨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도 통일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만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재하다는 점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등학교 정치』에서는 북한의 정치 실상과 인권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³⁸ 『고등학교 한국지리』 (서울: 두산, 2003), pp. 250~269.

근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회화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중학교과정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북한의 교과서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압축시켜놓은 결정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통일관과 통일교육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일반교과와 북한에서만 가르치는 특정교과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 정치이념적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의 교과서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항일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사회주의 도덕』, 『현행 당정책』 등을 들 수 있다.

6년 과정의 북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종류와 주간 시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교 과 목	학년별 주당 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2	2
항일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1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국 어	5	5	4			
문 학				4	3	2
한 문	2	2	1	1	1	1
외국어	4	3	3	3	3	3
력 사	1	1	2	2	2	2
지 리	2	2	2	2	2	
수 학	7	7	6	6	6	6
물 리		2	3	4	4	4
화 학			2	3	3	4
생 물		2	2	2	3	3
체 육	2	2	2	1	1	1
음 악	1	1	1	1		
미 술	1	1				
제 도				1	1	
컴퓨터				2	2	2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출처: 임순희,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22.

다음은 북한 중학교 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 학년별로 몇 가지만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인용’하는 선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가. 중학교 1학년 『국어 1』의 경우

중학교 1학년용 『국어 1』은 ‘통일의 문을 열자’ 단원에서 “동무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허리를 끊기운 채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 조국통일! 이것은 위대한 수

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생전의 뜻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입니다. 조국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두리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조선인민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 손으로 기어이 이룩하여야 합니다. … 우리 소년단원들도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지키는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통일만세를 부를 그날을 하루 빨리 더 앞당겨 와야 하겠습니다”³⁹라며, 민족분열의 책임을 미국에 있다고 규정짓고, 이러한 남북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남한을 해방시켜 조국통일을 이루자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을 목숨으로 지키는 소년근위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통일 달성을 빙자하여 은연중에 위기에 처한 김정일 정권을 보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면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중학교 2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2』의 제18과(‘민족공동의 통일강령’)에서, 김일성이 1971년에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대한 해설과 함께 1972년의 ‘7·4공동성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한의 ‘반통일 분열책동’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남조선 괴뢰도당은 온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기운에 겁을 먹고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섰습니다”⁴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 중학교 2학년 『한문 2』의 경우

『한문 2』의 51과(‘民族大團結의 기치’)에서는 “… 온 民族이 和合하고 하나로 團結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祖國統一이다. 北과 南, 海外的 全體 朝鮮 民族은 民族의 太陽이시며 祖國統一의 위대한 救星이신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³⁹ 『국어 1』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p. 134~136.

⁴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2』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p. 57~60.

大元帥님께서 밝혀주신 祖國統一方針을 높이 받들고 偉대한 金正日元帥님을 中心으로 民族大團結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北과 南에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存在하고 있는 條件에서 民族의 和合과 統一을 이룩하는 길은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制度, 두개 政府에 기초한 連방제方式의 祖國統一方案밖에 없다. … 少年團員들은 偉대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의 領導를 높이 받들고 祖國統一을 위한 우리 民族의 기세찬 흐름에 自己의 힘과 才能을 다 바쳐야 한다”⁴¹라며, 김일성의 ‘조국통일방침’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해 찬양하면서 이를 계승한 김정일의 영도에 소년단원들이 전적으로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또한 통일을 빙자해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의 충성을 강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중학교 3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3』의 경우

중학교 3학년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3』의 제10과(‘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에서는 “위대한 원수님께서서는 아메리카주와 서유럽지역 교포들속에 주체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묶어 세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⁴²라며, 김일성의 서구 및 북미 지역 교민들에 대한 통일전선을 통한 통일 노력을, 제19과(‘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파썸독재를 짓부시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 위대한 원수님께서서는 전두환역적의 파멸을 필연적이라고 하시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놈도 이전 독재자의 뒤를 따라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힘 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라며, 김정일의 ‘남조선 해방’을 통한 통일 노력을 각각 찬양하고 있다.

제23과(‘그 날은 오리라’)에서는 “…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국의 통일을 한 사코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놈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⁴¹ 『한문 2』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 96.

⁴²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3』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0), pp. 24~29.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괄로 악랄하게 탄압해 나르고 있습니다. … 련방제방식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국통일 방식입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할 것입니다”⁴³라며, 미국과 남한 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남북대화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공화국 통일방안’을 찬양하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을 관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마. 중학교 3학년 『한문 3』의 경우

『한문 3』은 제31과(統一의 웨침)에서 김일성의 “南朝鮮의 愛國的青年學生들과 民主人士들을 비롯한 各界各層 人民들도 祖國統一을 爲한 鬪爭에 勇敢히 일떠섰습니다”라는 교시와 함께 “南朝鮮의 青年學生들과 各界各層 人民들은 自主, 民主, 祖國統一을 爲한 鬪爭에 勇敢히 일떠나서고 있으며 이 陣頭에는 正義와 眞理를 사랑하는 青年學生들이 서 있다. 그들은 惡名 높은 <보안법>의 철폐와 련방제에 의한 祖國統一을 要求하여 到處에서 鬪爭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그러나 파쑈정권은 統一指向의인 의로운 活動을 벌린 青年學生들과 民主人士들을 犯罪시하면서 그들의 組織을 無效로 선포하고 그들을 銃칼로 彈壓하고 있다. 그러나 南朝鮮青年學生들은 學友들의 념원과 志向을 實現하기 위하여 繼續 힘차게 鬪爭하고 있다. 파쑈정권의 穢은 政治를 決判내고 自主, 民主, 祖國統一을 爲한 그들의 鬪爭은 銃칼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⁴⁴라며 ‘반통일적’인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남한의 청년학생들이 북한의 통일방안에 찬동한다면 반정부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있다.

이는 물론 남한의 상황을 왜곡날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김일성·김정일의 통일관에 대해 찬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중학교 4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의 경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는 제10절(‘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

⁴³ 위의 책, p. 43.

⁴⁴ 『한문 3』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 43.

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해외교포운동의 발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남조선에서 미제참략군을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협정을 맺을 것을 제의하시였다. 그리고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의 교환, 경제문화교류를 실현하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람들의 접촉을 이룩할데 대하여 제의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남조선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인민들에게 뚜렷한 투쟁방침을 밝혀주시였다. … 남조선혁명가들은 주체44(1955)년 12월에 진보당을 내오고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⁴⁵라며, 김일성 집권 초기의 통일 노력을 찬양하고 있다.

사. 중학교 5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의 경우

중학교 5학년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는 제3장 8절(‘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지침이다. … 그러므로 조국통일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구현해야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이룩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사상은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기본열쇠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전략사상에 기초하여 남조선애국력량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 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 남측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를 하고도 정작 세상에 발표할 북과 남의 공동성명초안을 작성할 때 표현과 문구를 가지고 난관을 조성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넓은 도량과 아량 있는 포

⁴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1999), pp. 175~178.

응력, 진지한 설득력으로 남측대표들을 끝까지 납득시켜 공동성명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공동성명의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짐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 섰다”⁴⁶라며,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통일원칙과 5대방침의 성립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당시 김정일이 관여한 일화를 소개하며 찬양하는 한편, 이제는 이 원칙과 방침의 관철을 위해 김정일의 영도 밑에서 단결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 중학교 5학년 『한문 5』의 경우

『한문 5』의 제10과(‘우리의 念願은 統一’)에서는 김정일의 “靑年들은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서 선봉鬪士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교시를 전제한 다음 “分裂된 祖國을 統一하는 것은 北과 南, 海外的 모든 朝鮮靑年들과 全體 朝鮮人民의 念願이고 至上의 民族史의 課題이다. … 지난날 南朝鮮에 顧問의 名目으로 派遣되어 온갖 行勢를 다하던 米帝侵略者들이 오늘도 南朝鮮에서 政治, 經濟, 軍事의 命脈을 틀어쥐고 主人行勢를 하고 있는 한 統一의 光明이 밝아올수 없음을 自覺한 그들, 惡이 善을 억압하고 不正義가 正義를 짓밟으며 米帝의 脚本에 따라 움직이는 파쑈교형리들이 살판치는 暗黑天地 南朝鮮, 分裂된 땅에서 통치체제의 不合理한 社會現實을 그대로 두고서는 배움의 熱望과 理想도 自由의 피타는 渴望도 實現될 수 없음을 自覺했기에 그들은 京鄕各地와 街頭에서 暴風을 일으키면서 鮮血을 뿌리고 있는것이다. … 南朝鮮靑年學生들의 正義로운 피의 대가는 반드시 于百倍로 치루어질것이며 歷史는 自己의 빛나는 갈피속에 이들의 장한 모습과 이름들을 永遠히 記憶할것이다”⁴⁷라며, 남한 청년학생들의 반미 통일운동을 부추기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상황을 과장 왜곡함으로써 북한의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토록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⁴⁶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3), pp. 113~116.

⁴⁷ 『한문 5』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p. 19~20.

자. 중학교 5학년 『영어 5』의 경우

중학교 5학년용 『영어 5』에서는 제16과(‘A Poor Girl in Seoul’)에서 서울에서 벌어진 한 가난한 소녀에게 자행된 미군의 ‘만행’을 예화로 들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며 반미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⁴⁸

차. 중학교 6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6』의 경우

중학교 6학년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6』은 제4장 ‘조국통일 령량 강화’ 제목하에 ‘조국통일의 주체적혁명력량 강화’,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 강화’에 대하여,⁴⁹ 제5장 9절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⁵⁰ 제7장 9절에서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 마련’이라는 제목하에 ‘조국통일 3대현장 정립’, ‘력사적인 평양상봉,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북남 공동선언리행 적극 추진’에 대하여⁵¹ 논하면서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김정일의 역할을 찬양하고 이 선언이 북한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중학교 6학년 『한문 6』의 경우

『한문 6』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오늘 南朝鮮 靑年學生들과 人民들은 매우 어려운 環境에서도 共和國北半部를 希望의 燈臺로 바라보면서 勇敢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교시를 내세운 다음, “오늘 南朝鮮 靑年學生들과 人民들은 偉대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을 7千萬民族의 太陽, 民族의 救世主, 祖國統一의 救星, 民族大團結의 中心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元帥님에 대한 欽慕의 마음 더더욱 불같이 달아오르고 있다. … 敬愛하는 金正日元帥님은 眞正 남녘同胞들에게 있어서 삶도 希望도 다 맡기고 사는 마음의 기둥이고 運命의 救世主이다. … 偉대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을 民族의 太陽으로 높이 모시고 米帝와 그 走狗들을 打倒하고 祖國統一의 民族의 宿願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確固不動한 信念과 意志밑에 살며 싸우는 남녘겨레들의 앞길을 막을 힘은 世上에 없

⁴⁸ 『영어 5』.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1999), pp. 103~104.

⁴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6』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3), pp. 78~85,

⁵⁰ 위의 책, pp. 134~137.

⁵¹ 위의 책, pp. 224~232.

다”⁵²라며, 남한의 청년학생들이 김정일을 우러러보며 미국과 남한 정부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고 과장하여 해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남한 청년학생의 김정일 찬양과 반미 및 반정부 활동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 청년학생들에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북한 중학교 교과서의 주요 과목 인용문에서 보듯이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일교육에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통일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이 남한의 청년학생들의 반미 및 반정부 활동의 왜곡 과장을 통한 북한 청년학생들의 정권 및 체제에 대한 충성심 유도, 남한 실상에 대한 왜곡 과장,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주장, 통일을 위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 찬양 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남북관계 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IV. 남북한 통일교육의 수렴방안 검토

남북한 통일교육의 수렴은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통일’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나 통일 이후를 의미하는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나 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로는, 그리고 북한의 체제 붕괴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태세가 확고한 한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이 통일교육의 수렴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⁵³

따라서 본 장에서는 통일과정에 해당하는 남북연합단계와 완전통일국가를 염두에 두고 개괄적 차원에서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통일교육의 수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⁵² 『한문 6』(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2001), p. 32.

⁵³ 물론 현 단계에서도 대북방송을 통한 통일교육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로 편입되는 것을 상정해야 하므로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1. 제도적 측면에서의 수렴방안

남북연합단계의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통일교육의 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차원의 통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한 통일교육의 체계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정당, 사회 및 언론단체 등 통일교육 담당 주체들간에 먼저 횡적이고 민주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심기구의 주 역할은 통일교육 담당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이들간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통독과정 및 통독 이후 그 임무를 잘 수행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조직 및 운영방법은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부가 통일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통일부장관이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되는 기획, 연구, 자료 개발, 교육·연수 실시, 타 기관과의 협력, 지원, 평가 등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통일부에서만 전담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같은 기구를 통일과정 이전에 미리 설립하여 통일교육의 지원 및 관리를 총괄하게 하고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안 중의 하나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 형태로 개편하고, 그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여 국가 통일교육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⁵⁴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차원에서 북한지역을 고려하여,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운용 중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북한지역에 설치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미리 구성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남북연합단계인 통일과정에 돌입하면, 초기에 단일 통일교육체제

⁵⁴ 김창환, “통일교육기본법 개선 방안 연구,” 『통일교육연구』, 제3권 1호 (2003), p. 54.

를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남북한 방송망의 완전개방을 통해 공통의 내용을 방송하는 체계를 확립한 다음, 차츰 북측지역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확충해 나가며 남측의 통일교육 요원이 직접 북한지역의 통일교육을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북한지역에 필요한 통일교육요원 확보는 현행 통일부에 의해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의 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리 통일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대학의 통일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관을 심어줄 교원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크게 중요성을 띤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 양성 대학은 국민윤리 과목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을 커리큘럼 확충을 통하여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내용적 측면에서의 수렴방안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의 수렴을 위해서 남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북한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을 위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통일교육 내용은 이미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논외로 하고, 북한지역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강하는 형태로 남북한 통일교육의 수렴방안만을 개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는 남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북한 교과서에서 그간 왜곡해 온 남한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성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일방적으로 편협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⁵

이 경우 무엇보다도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⁵⁵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 214.

체제 변화에 따라 심리적 갈등으로 한동안 정신적 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북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⁵⁶

교육 내용으로는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자본주의체제일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과 체제에 대한 가치관을 달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타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생활규범을 체질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내면화하는 내용으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통일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거부한 채 맹목적 집단주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생활에 익숙해져 수동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살아온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2) 자유, 평등, 복지 이념의 확산

자유, 평등, 복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⁵⁶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2.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에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대립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가 규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뜻한다면, 이 자유로 인한 불평등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평등이어야 할 것이다.⁵⁷

획일적인 평등의 강조는 사회 발전의 동력을 상실케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통일한국의 복지 이념은 ‘시민적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3) 비판정신과 다원주의·법치주의정신의 함양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가 비판정신과 다원주의 정신이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서 비판정신과 다원주의 정신의 함양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이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의 비판정신과 다원주의정신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북한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적 경험이 전무한 데다 다중적 감시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민의식(臣民意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끊임없는 선전선동에 세뇌된 결과,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을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판정신과 다원주의정신의 함양을 도와야 한다. 그러할 때 수령절대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망령으로부터 속히 탈출,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민주주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식속에 법치주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주체사상의 공고화와 함께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며,⁵⁸ 그의 교시와 지도는 ‘무

⁵⁷ 위의 책, p. 3.

⁵⁸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고, 그 핵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이 포함되

오류성'을 갖는다고 강조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수령절대주의⁵⁹ 통치구조 속에서는 수령의 의지가 법체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법치주의 수립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4) 민주정치과정에 대한 인식·태도와 타협정신 함양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을 민주정치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정치과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형성을 위한 내용을 크게 강조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으로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에 해당되지만, 당 정책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명목상의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더욱이 당·국가 운영에 있어서 수령의 교시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론정치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애당초 민주적 방식의 정치과정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여론 형성 과정, 정당 및 선거과정의 기능과 역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삼권분립의 의미, 지방자치의 기능 및 운영원리 등 민주정치과정 전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타협정신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다원적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들을 획득하도록 하는 교

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인체기관에 비유하면, 그 중추신경의 핵인 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령은 사회 정치 집단의 뇌수인 셈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1987년 7호), p. 16; 그런데 문제는 인민대중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만 비로소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비약시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체계이다. 오일환,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 경제』(서울: 을유문화사, 1999), p. 47.

⁵⁹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수령론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수령절대주의’는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이기주의보다 수령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통치자들의 개인이기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서울: 시대정신, 1999), p. 52.

육이라고 할 수 있다.

(5) 폐쇄적 민족주의의 극복

폐쇄적 민족주의의 극복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원래 국민통합을 위한 기재로 쉽게 활용되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치이데올로기의 하나로 기능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위해 민족공동체의식은 강조되어야 마땅하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달리 말해서 탈냉전 이후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민족적 특수성은 일정 부분 약화되겠지만, 그만큼 인류의 보편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주의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만약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일부 청년들도 통일 초기에 동독지역에서 유행한 사회현상처럼 극우민족주의 이념에 공감하며 각종 사회 일탈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극우민족주의 발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식의 전환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⁶¹

나. 건전한 자본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세계화시대의 보편적 경제체제인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북한지역에 실업자들이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교육은 사회주의는 분배정의와 사회적 혜택 등의 측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착취사회라고 강조해온 결과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⁶⁰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 171.

⁶¹ 박영호,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4~35.

인다.

탈북자들이 자본주의사회의 경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 이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생활방식을 두려워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주민들은 사회적 계층서열에 있어서 분명히 급격한 하향 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⁶²

통독 이후 동독인들이 이전 체제에 비해 훨씬 물질생활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인들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운영원리와 자본주의 윤리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천민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 지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련 및 동구권 현실사회주의체제는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아니한’ 체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아니한’ 천민자본주의 역시 추방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자본주의가 건전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결코 투기가 횡행하지 못하는, 일한 만큼 응당한 대접을 받는 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제반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남북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남북의 이질화만큼이나 그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한은 민

⁶² 오일환, “통일 이후 정치교육을 통한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평양학회보』, 제1집 2호 (2002), pp. 137~138.

주화의 진행과 함께 통일교육의 내용이 민주시민교육 수준으로 발전해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아직도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반한·반미 정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가며 화해·협력 단계의 심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우리의 실상이 북한사회에 전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어 북한 스스로가 전대미문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차원에서의 “남한을 미제식민지로, 거지가 우글거리는 최후진사회”로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점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나 회담, 대북지원과정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교육이 그 정책 기조나 원칙면, 그리고 관리체계나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기술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통일교육의 질·양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통일교육 수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 이질화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완성, 즉 ‘마음의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야 정치인 및 시민단체 대표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접수: 3월 30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